

‘하도급법 우회’ 꼼수에 제동 건다 해외법인 거래도 실질따져 규제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기본계약·관리감독 여부 종합 판단
국내 하도급 유사 시 법 적용 가능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수력원자력

제네바 국제발명전 9관왕
VR·저장모듈, 기술력 입증
은상·동상·특별상 등 다관왕 차지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9일~13일까지(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5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참여, 은상, 동상, 특별상 등 총 9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42개 나라에서 1050여 점의 우수 발명품이 선보였으며, 각국 심사위원들이 발명품의 혁신성, 시장성, 기능 및 실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은상을 수상한 ‘SSNC(i-SMR Smart Net-zero City)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은 도시 전력의 수요-공급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현 기술을 선보여 국제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친환경·경제적 에너지원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동상을 수상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모듈’과 ‘다중 참여형 APR1400 가상현실(VR) 구현 장치’는 각각 경제성 및 혁신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우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술사업화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봄배추 등 수급안정 총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무 등 채소류 최대 40% 할인 지원

정부가 배추·무 등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할인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 시장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잦은 이상기상과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봄배추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봄 배추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작

년 가을 고온과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배추의 공급 확대를 위해 봄 작형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봄배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확대 물량에 대해 전량 정부가 수매·비축한다. 여름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에 대비하여 예비묘·약재 등 농자재 공급 및 생육관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대비 10% 이상 증가해 봄철 배추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남부발전, 함안군 전력 66% 책임진다

함안 사내산단에 연료전지 준공
19.8MW 규모, 163GWh 전력 생산

한국남부발전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19.8MW(메가와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천년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해 8월 주기기 설치, 12월 시운전을 거쳐 올해 2월 21일 전체 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신에너지원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대비 41% 수준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기 전 브릿지 역할로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발전원으로 꼽힌다.

또 연간 163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해 함안군 전체 산업용전력소비량의 66%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남부발전의 축적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살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함안군 슬로건처럼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70세 이상 농촌 경영주 ‘절반 넘어’

통계청, 고령화 여파 1년새 3%p↑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5%에 달했다. 또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4.1%(8만 5000명)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8%로 전년대비 3.2%포인트(p)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52.6%)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39.2%

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0.5%)와 50대(14.0%)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 비해 70세 이상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비중이 1년 전(47.8%)과 비교해 3.0%p 늘어났다.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농림어가의 주요 가구유형은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8%로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의 55.7%는 전업농가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고 44.3%는 겸업농가로 전년대비 동일했다. 경지규모를 보면 1.0헥타르(ha) 미만인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74.0%)를 차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농업 키운다… 기후 대응도 강화”

서효원 농진청 차장
“현장 맞춤 기술로 농가 지원”

농촌진흥청이 농촌지역 스마트팜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고, 시설채소의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에 한창이다.

17일 농진청에 따르면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이날 강원 양양·강릉을 방문해 이 같은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서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 등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서 차장은 이날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에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